

#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애로사항 논의

우범기도 정부부지사 주재  
간담회에서 투자 진행상황 점검



전북도는 우범기 정부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우범기 정부부지사(가운데)와 투자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우범기 정부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산단에 투자 중인 기업체를 격려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해 새만금산단 투자 활성화와 투자이행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주)케모이엔지, 다스코(주), (주)대창모터스, 솔에코(주), 에디스모터스(주) 등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5개 사가 참석해 투자 진행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단 내 환경정비, 공장설립 행정사항 등 사전 안내, 노선버스 운행 등을 건의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환경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공장설립 관련 사전 서류 검토 등 행정사항에 대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버스가 운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20년부터 연 2회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 해소에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새만금산단 투자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지난 4일 의정실에서 재한 미얀마 전북학생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미얀마 현지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송지용 도의회 의장, 유학생들과 현지 지원방안 모색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은 지난 4일 의정실에서 재한 미얀마 전북학생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미얀마 현지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송 의장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1천여 명이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고 3,000명이 넘는 국민이 불법 구금된 상태라는 유학생의 말을 들은 뒤 "전북도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와 부상자의 아픔을 치유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도 많은 희생과 댓가를 치르며 민주화를 이룩한 것처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얀

마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화를 되찾길 응원하며 연대의 뜻을 같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송 의장은 "과거 6.25 전쟁 때 미얀마는 한국에 5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한 국가"라며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난민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과 텐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송지용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와 장협의회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제안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미얀마 현지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 중인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4차 국가철도망 전북 현안사업 반영을"

민주 김윤덕 의원,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 세우도록 노력"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 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지난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라면서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2시간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의 시간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과 영남의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아울러,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전주-김천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결국, 영남과 호남의 이동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모두 타

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괄했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종합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천-익산 건설사업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지역 소외도 지적했다. 그는 "호남 3경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전남 동부권 이다"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기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없다"고 성토했다. 익산국가산업단지 안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 후보자는 "4차 철도망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공개채용 확대 노력

"청년층 사이서 더 공정성 있는 채용 방식으로 인식되기도"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손경식 경총회장 '약속'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이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만나 공개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일각의 청년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한 이 전 대표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기업 채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업의 통 큰 공개채용 확대를 요청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 수시채용보다 공개채용을 더 공정성 있는 채용 방식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손 회장은 "수시채용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수시채용 역시 기업마다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개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청년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손 회장은 "일부에서 청년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여줄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인력 mismatch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미래 산업 인력양성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 인력의 해외 및 협력업체에서의 활용방안 등 고령자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고용유연성 확대 등 젊은 세대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이 시급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뉴시스

## "새만금신항, 개발 초기부터 수소전용항만으로 개발해야"

민주 이원택 의원,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 "수소저장·수출입 항만 도입 타당성 검토 필요"

새만금신항이 중부권 그린수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린수소 수출입 전용항만"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부안)은 해양수산

부장관 후보자(박준영)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새만금신항이 그린수소전용항만"으로 개발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이원택 의원의 서면질에서 답변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을 저탄소·스마트 항만 등 국제적인 트렌드를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에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

므로 새만금신항을 '수소저장 및 수출입을 위한 항만시설'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새만금은 한국을 선도하는 그린에너지 허브를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고, 국제협력유지에 그린수소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도시·산단의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신항을 그린수소전용항만으로 개발하고, 개발 초기부터 설계에 반영해 개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삼성에버랜드노조 관련 답변 이끌어내

민주 윤준병 의원, 안경덕 고용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 "사측 부당노동행위로 피해 입은 노동자들에 유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음·고창)이 지난 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경덕 후보자로부터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유령노조로 판단하지 못한 지난 과오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윤 의원은 "안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문제인 정부의 7대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면서 "다만, 공직기간 중인 2011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노조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 후보자는 삼성에버랜드의 유령노조 논란을 다룬 2011년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임원도 알 수 없고 활동도 없다면 정상적인 노조인가?"라는 감사위원(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한 후, 다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서면답변을 제출하

면서 답변을 변경한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그 당시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2심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삼성에버랜드노조와 관련해 유령노조로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전에 확인이 됐다면, 10여년 동안 정상적인 운영과 함께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아쉬움도 남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문제 초기 단계였고, 경기지청에서 조사를 하면서 증거 확보 등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그 당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도당 청년위, 송지용 도의장과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일 전북도의회 의정실에서 위원회 주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청하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형 청년 정책 제안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등 다양한 정책 의견 수렴이 논의됐다. 또한 30대 주거문제 등 전북 청년이 전북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청하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전북 청년을 위한 전북형 청년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고한 전북에서 자리 잡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학교 현장 내 방역수칙 철저'

김희수 도의원, 도교육청 코로나19 현장확인반 참여

"코로나19 이전 같은 학교생활을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학교 현장 내에서 철저히 지켜지는 방역 수칙과 부족한 방역물품 준비"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이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학교 방역 현장확인반'에 참여해 지난 4일 '전주용소중학교'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용소중의 애로사항이 비단 한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오늘 방문한 이



곳의 목소리를 정책직의와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소속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연1회 이상 의무화

김대중 도의원, 운영조례 개정 발의... 위원회 구성 등도 마련

전북도의회 김대중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음2)이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그동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름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 및 절차와 포상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사항 간의 적극행정 과제 발굴과 적극행정 관련정책 수립·추진에 관한사항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조항까지 마련하게 됐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